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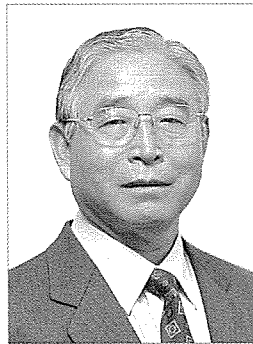
# 과학기술 ‘대선공약’은 지켜져야 한다

과학기술 ‘위기’ 극복, 대통령의 관심과 지원에 달려

지난 국민의 정부 5년 동안에 과학기술계는 적지 않은 변화를 겪었다. 과학기술기본법의 제정을 비롯하여 과학기술정부예산 5% 수준 인상, 과학기술처에서 과학기술부로의 승격,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설립,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총리실 이관 등 커다란 변동이 있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한 기대와는 달리, 현재 과학계에서는 다양한 문제들이 속출하고 있다. 청소년들의 자연계 기피, 이공계 대학의 정원 미달, 출연연구기관의 핵심 연구원 이탈, 과학기술인의 사기 저하 등 국가경쟁력 자체의 기반이 무너질지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급기야 지난해 과총에서는 과학기술 위기를 선언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100만 과학기술인 인터넷서명운동을 실시하였다. 또한 16대 대선 후보자를 초청하여 과학기술에 대한 철학과 비전, 그리고 정책대안을 점검하는 대토론회를 갖기도 하였다.

우리나라는 OECD와 WTO의 회원국으로 머지않아 국내시장을 완전히 개방해야 한다.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GDP의 40% 가까이 차지하는 현 산업구조상 시장 개방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한 국가경쟁력의 확보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다.

90년대에 들어서서 선진국들은 과거와는 달리 과학기술 행정 기구를 새롭게 설치하고 국가가 직접 나서서 강력한 기술추진정책을 펼치고 있다. 미국은 93년도에 국가과학기술회의와 대통령 과학기술자문회의를 행정명령으로 설치하였고, 영국은 93년 과학기술회의에 이어 97년 각료선견(閣僚先見) 그룹을 설치했으며, 독일 역시 95년도에 연구기술 이노베이션 회의를 서둘러 설치했다. 프랑스와 일본에는 이미 이러한 기능을 하는 기관이 존



글 박승덕 |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부회장

재하고 있다.

미국은 90년대에 들어서면서 정보산업을 중심으로 선진국들과 달리 유일하게 지속적인 플러스 경제성장을 이룩하였다. 이것은 클린턴 전대통령이 과학기술행정체계를 통해 강력한 기술추진정책을 밀고 나간 결과일 것이다.

## 국가과학기술 행정체계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

국가의 과학기술행정체계는 크게 두 단계로 구분된다. 과학기술 전략목표를 세우는 과정과 이를 효율적으로 실행에 옮기는 집행 단계가 그것이다. 국가의 과학기술 전략목표는 국가목표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국가목표는 대통령후보가 국민에게 공약하고 선거에서 승리함으로써 확정되는 것이다(하지만 지난 16대 대통령 선거에서 과학기술정책이 선거의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지 못한 면이 있어 매우 안타깝다). 한편 과학기술전략의 실천목표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대통령과학기술자문회의의 자문을 통해 설정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과학기술자문회의는 추진전략에 대한 자문이 아니라, 과학기술의 주요 이슈를 대통령에 보고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

과학기술 행정체계의 두 번째 단계는 설정된 과학기술전략의 성공적 집행에 필요한 범부처적인 종합조정을 하는 단계로 정부의 집행업무 영역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고 국가연구사업 관련부처의 장관으로 구성된 국가과학기술회의를 설치하였다. 이 회의는 각 부처에서 경쟁적으로 신청한 국가연구사업이 설정된 국가전략목표와 일치하는지를 검토하고, 사업의 우선 순위와 필요 예산의 배분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국

지난해 과총이 주관한 대선 후보자와의 토론회에서,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청와대에 과학기술 수석제를 신설하고 과학기술예산을 획기적으로 증액하는 등 과학기술을 정부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이다.

기연구사업의 법정 의결기관이다. 하지만 과학기술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은 예산처의 심의를 다시 거쳐야 하고, 그 과정을 통과해야 예산이 집행되는 비합리적인 절차가 되고 말았다.

이렇게 국가과학기술의 행정체계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대통령이 과학기술자문회의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관련부처의 장관 외에 일부 민간인도 과학기술회의의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어 의결기관의 집행 효율이 떨어진다는 것도 한 몫 한다. 국가예산의 5%에 달하는 국가연구사업을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국가과학기술회의에는 막강한 사무국을 두어 지속적으로 업무를 관장해야 하는데, 현재는 과학기술부와 기타 정보통신부, 산자부, 환경부 등이 간사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어 본래의 기능을 발휘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 미국의 경우 대통령이 과학기술 업무에 직접 관여

미국의 경우 국가과학기술회의의 의장이 대통령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대통령과학기술 담당보좌관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그리고 대통령과학기술자문회의는 민간인 대표와 함께 대통령과학기술 담당보좌관이 공동의장을 맡고 있어 업무와 관련된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미국의 국가과학기술회의는 부처간 업무의 종합적인 조정을 위해 여러 개의 상설위원회와 특별위원회 등이 실무 추진팀을 구성, 운영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사항은 대통령과학기술 담당보좌관이 40여 명의 테크노크라트로 구성된 과학기술정책국(OSTP)의 장관을 겸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OSTP는 대통령의 직속기구로서 대통령과학



일러스트 · 권기수

기술자문회의와 국가과학기술회의의 사무국 역할까지도 겸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대통령은 장관급의 과학기술담당보좌관과 막강한 사무국을 설치, 과학기술 전략계획의 수립은 물론 부처간의 종합조정까지도 직접 관여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는 셈이다.

우리는 아직도 선진국 시장에서 버틸 수 있는 핵심요소기술과 이 시장에서 잘 팔리는 제품을 개발하는 능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강력한 과학기술전담부서 역할을 해야 한다. 현 과학기술부의 조직보다는 국가전체의 과학기술관련 사업을 통합, 지원하고 국가과학기술회의의 사무국 역할도 담당하며, 과학기술관련 인력과 출연연구기관까지도 관장할 수 있는 보다 강력한 조직으로 개편해야 할 것이다.

과학기술의 발전에서 통치자의 역할이 대단히 크다는 사실은 역사가 뒷받침해주고 있다. 대통령이 과학기술에 갖는 관심과 지원은 바로 과학기술의 발전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과총이 주관한 대선 후보자와의 토론회에서,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청와대에 과학기술 수석제를 신설하고 과학기술예산을 획기적으로 증액하는 등 과학기술을 정부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이다. ☞